

# MB 정책효과, 서울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2010.3.2 | 최민선\_새사연 연구원 | humanelife@saesayon.org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 목 차

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http://saesayon.org>

## 요약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과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보았다.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본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는 첫째, 가구의 실질 소득/지출 추세와 사교육비 증가추세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09년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추세 완화는 가구 소득의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가계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가리킨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두 번째 특징은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모두 낮아졌다. 둘째,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고,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마저도 줄었다.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 비율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셋째,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서울지역과 다른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세 번째 특징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사교육비의 증가율은 2008년 4.2퍼센트에서 2009년 11.8퍼센트로 올라 지난해 7.6퍼센트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동기 전국평균 3.9퍼센트포인트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사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도 2009년 전국평균이 1만 2천원 증가한 반면, 서울은 4만 2천원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사교육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이고, 때문에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경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때, 정부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의 수요를 부추기는,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학과라치제, 자율형사립고 등의 정책은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네 번째 특징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교육은 확연히 줄고 고등학교 사교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사교육의 경우 예체능과 특기적성 사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쉽게 줄일 수 있는 반면, 중고생은 체감되는 입시경쟁에 따라 사교육을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특기적성 사교육은 줄고, 영어, 수학과목 사교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입시경쟁에 의한 사교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가며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은 최대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이렇듯 국민들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을 받는 원인은 현 정부의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만들어 홍보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잘못되었음을 정직히 시인하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교육개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진정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원한다면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본문

## 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지난해, 사교육비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 20조 9000억 원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8년 23만원보다 3.9퍼센트 올랐다.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총 규모면에서 2008년 4.3퍼센트이던 증가율이 2009년 3.4퍼센트로 둔화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2008년 5.0퍼센트이던 증가율이 2009년 3.9퍼센트로 1.1퍼센트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 ‘증가세’ 둔화의 주된 이유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사교육비 관련 대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원 심야단속, 학(學)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다른 지출을 줄여가며 자녀를 학원에 보냈다. 그 결과 사교육비 규모는 어김없이 불어났다. ‘유지’도 아니고 여전히 ‘상승세’다. 하지만 정부는 사교육비가 예년보다 ‘덜’ 늘어났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리고 당당히 말한다.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통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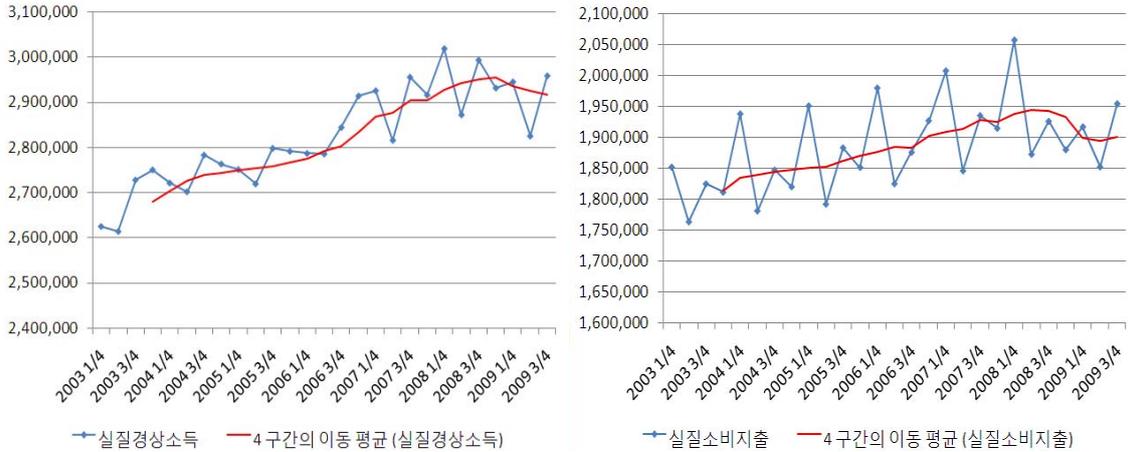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이 정부의 정책 효과인 것일까.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자.

##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각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커졌다. 정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자.

첫째, 가구의 실질 소득/지출 추세와 사교육비 증가세 비교를 통해, 지난해 경기침

[그림 1] 2인 이상 가구 실질경상소득 및 실질소비지출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체 속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각 가계의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2008년보다 3.4퍼센트(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란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로 인한 각 가계의 경제적 압박은 지난해에 오히려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사교육비 지출이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도 다소 무리가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비 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1]은 2인 이상 가구의 실질경상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의 추세를 나타낸다. 꾸준히 상승하던 실질소득/지출이 2009년에는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감소는 지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2009년 가구는 소득 감소로 지출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지출의 한 항목인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시켰다. 하지만 워낙 큰 소득 감소로 인해 이전 추세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는 못했다. 2008년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되, 2008년만큼 지출 폭을 크게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사교육비 지출 ‘증가추세 완화’는 최근 가구소득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가계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율은 2009년에 오히려 상승

1) 정부는 국민소득은 증가했지만 사교육비는 증가추세가 둔화됐음을 비교해, 그것을 정부의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이므로 가구소득과 비교해야 한다.

[표 1] 실질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증감률
실질사교육비 총액 (억원, %)	200400	199709	-0.3%	201171 0.7%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 (만원, %)	22.2	22.25	0.2%	22.51 1.2%

했다.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자료는 물가상승률이 제외되지 않은 명목사교육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07년 물가를 기준으로 2008년, 2009년의 물가상승률 4.7퍼센트, 2.8퍼센트를 반영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질사교육비 지출에 학생 수를 반영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를 보면, 2008년에는 0.2퍼센트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1.2퍼센트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오히려 지난해에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가리킨다.

###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두 번째 특징은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소비의 양극화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표 2] 참조). 특히, 2009년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사교육비로 학생 1인당 평균 51만원을 지출한 반면, 100만원 미만 계층은 6만원을 지출했다. 이 두 계층의 차이는 2007년 41만5천원, 2008년 42만원에서 지난해 45만원으로 대폭 증가해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22.2	23.3	24.2	28.8	31.0	32.3
100만원 미만	5.3	5.4	6.1	14.4	15.7	17.3
100~200 미만	10.7	10.8	11.1	17.9	19.5	20.0
200~300 미만	17.7	17.7	18.0	23.0	24.0	24.7
300~400 미만	24.1	24.5	24.6	28.6	29.8	29.8
400~500 미만	30.3	30.6	31.0	34.0	35.1	35.8
500~600 미만	34.4	35.6	37.2	38.0	39.7	41.8
600~700 미만	38.8	40.2	42.0	41.9	44.4	46.6
700만원 이상	46.8	47.4	51.4	50.1	51.6	56.4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9년 7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56만 4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1,110,919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100만원 미만 가구의 17만 3천원과 큰 격차를 보인다.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91.1퍼센트가 참여하는 반면,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35퍼센트만이 사교육에 참여했다. 고소득층은 절대 다수가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3분의 1만이 소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구소득에 따라 사교육참여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사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둘째,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고,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마저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08년 대비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0.9퍼센트포인트,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0.1퍼센트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과 가장 적게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함께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50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간계층은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해, 결국 전반적인 사교육비 상승세는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계층이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사교육 유형별로 봤을 때는 지난해,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문학습지를 이용하는 학생은 감소했다.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 비율은 2007년 9.6퍼센트에서 2009년 11퍼센트로 늘었으나, 방문학습지를 이용하는 학생은

25.2퍼센트에서 21.3퍼센트로 감소했다.

이를 가구소득별로 따져보면, 개인과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은 참여율이 0.1퍼센트포인트 줄었으나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1.1퍼센트포인트 늘었다. 방문학습지의 경우 1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참여율은 1.7퍼센트포인트 줄었으나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4.2퍼센트포인트 대폭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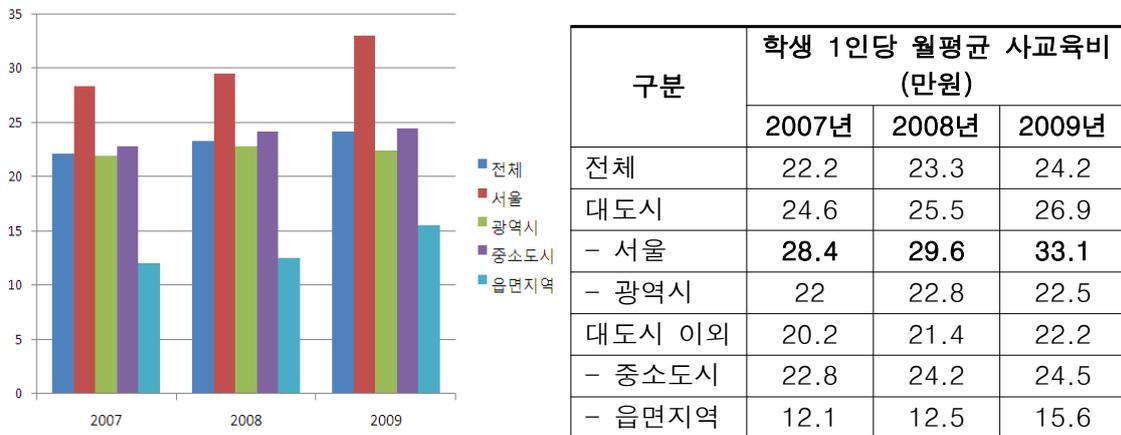
위와 같은 통계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자녀의 사교육도 포기한 반면, 고소득층은 저렴한 학습지를 대폭 줄이고 자녀에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개인과외와 같은 고액 사교육을 시켰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서울지역과 다른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해마다 더욱 심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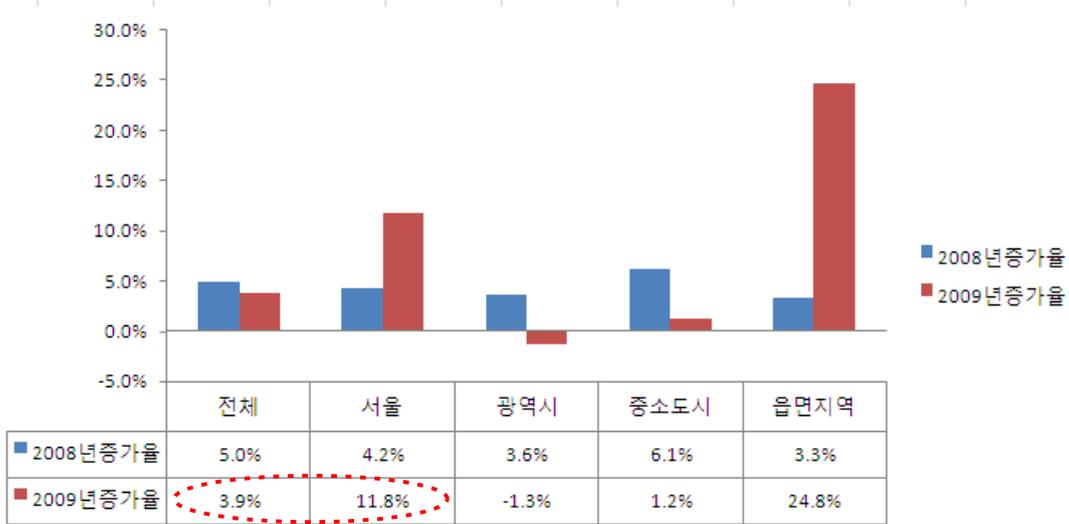
[그림 2]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크며,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지역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의 양극화는 읍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형학원이나 유명강사와 같은 사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형학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있고, 대학이 많은 서울에서 개인과외도 많이 받는 현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사교육 지출구조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림 2]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림 3] 지역별 사교육비 증가율



지역 간 사교육소비 격차의 또 다른 원인은 지역 간 소득차이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소득의 증가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수준은 전국평균이나 도시평균보다 높다.<sup>2)</sup> 즉, 서울지역 가구의 높은 소득이 서울지역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각 가정의 소득수준과 주거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는 사교육비 지출 증대와 함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사교육이 향후 대학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대학이 미래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사교육소비 양극화는 '가난의 대물림'이나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파생시킨다. 더불어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세 번째 특징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사교육비의 증가율은 2008년 4.2퍼센트에서 2009년 11.8퍼센트로 올라 지난해 7.6퍼센트포인트나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사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2009년 전국평균은 1만 2천원이 증가한 반면, 서울은 4만 2천원이 증가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평균에서 보였던 사교육비 증가율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09년 3분기 서울의 실질경상소득은 3060932원으로 도시평균 2986540원이나, 전국평균 2957948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평균 실질경상소득의 경우에도 역시 서울은 3050317원으로 도시평균 2902189원이나 전국평균 2823132원보다 높았다.

둔화가 관측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전국의 가정이 사교육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교육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서울지역이다.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대책을 세울 때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경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지난해 학과라치, 학원심야교습 금지, 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았음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학과라치제는 미등록 학원/과외 교습이나 수강료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뤘고, 오히려 사교육업계를 압박해 음성적인 개인과외를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외고 입시제도 개선안 역시 처음에는 '외고 폐지'라는 초강수를 뒀다가 '학생수 조절'로 크게 후퇴함으로써 특목고에 대한 수요를 낮추긴 역부족이다.

정부는 오히려 교육에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특목고와 유사하게 사교육 수요를 불러올 자율형사립고 같은 특수형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사교육 팽창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급증은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급증은 '사교육비 증가추세 둔화'라는 통계가 정부 정책보다 앞서 말한 소득저하에 의한 결과임을 가리킨다. [그림 3]과 같이 지난해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만 증가율이 낮아졌다. 즉, 서울지역이 두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교육 지출을 줄이거나 덜 늘렸기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추세가 조금이나마 둔화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의해 대다수 국민들이 사교육비를 줄일 때 정부정책에 민감한 서울지역에서 유독 사교육비 지출을 더욱 늘렸다는 말이다. 정책에 의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세 완화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진 후에야 의미가 있다.

##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네 번째 특징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는 먼저, 초등학교 사교육은 확연히 줄고 중고등학교 사교육은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3]과 같이,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8년 6.6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2퍼센트만 늘

[표 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2008년	2009년	증감차
전 체	22.2	23.3	5.0	24.2	3.9	75.1	75.0	-0.1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87.9	87.4	-0.5
중학교	23.4	24.1	3.0	26.0	7.9	72.5	74.3	1.8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53.4	53.8	0.4
일반고	24.0	24.9	3.7	26.9	8.0	60.5	62.8	2.3
전문고	6.7	6.9	3.0	6.0	-13.0	30.3	26.1	-4.2

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더 떨어졌다. 2008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0.5퍼센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8년 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7.9퍼센트로 현저히 늘어났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1.8퍼센트가 증가했다. 일반 고교 역시 사교육비와 참여율에서 각각 8.0퍼센트, 2.3퍼센트 대폭 늘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예체능과 같은 특기적성 사교육을 많이 받으며 중고생은 내신이나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을 받는다<sup>3)</sup>. 따라서 초등학생 사교육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줄이기 쉽지만 중고생은 체감되는 입시경쟁에 따라 사교육을 줄이기 힘들다. 지난해 초등학생 사교육이 줄어든 결과는 각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반대로 중고생 사교육이 팽창한 것은 학생들의 성적경쟁을 촉발하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입시경쟁에 의한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또 다른 근거로는 특기적성 사교육은 줄고 영어, 수학 과목 사교육은 팽창한 결과를 들 수 있다. 과목별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2007년 이후 초등학생은 영어, 일반고생은 수학에 대한 지출액이 크게 올랐다. 반면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각각 초등학생은 1000원, 일반고생은 3000원씩 올랐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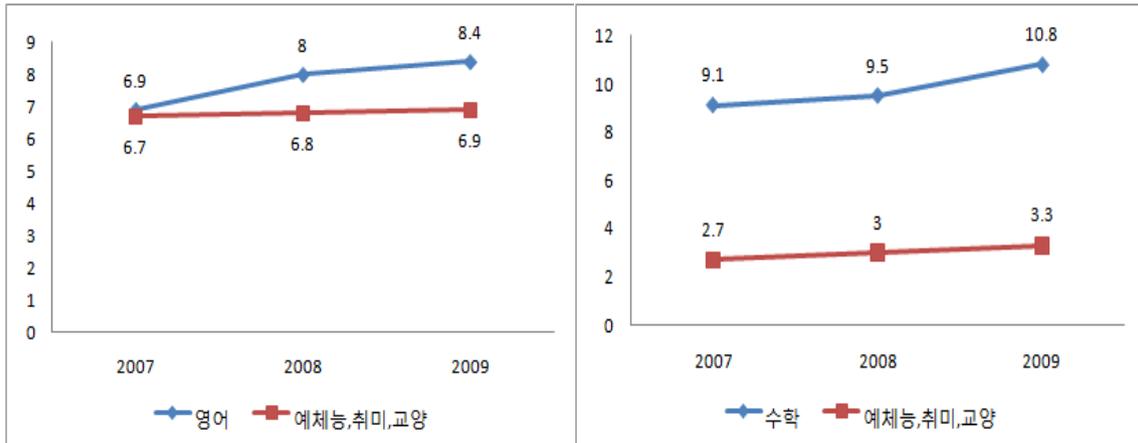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은 방과후 학교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5]와 같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특기적성 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 참여율은 줄어들고 교과 관련 참여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다양한 소질 개발보다 내신이나 입시성적 향상을 위한 경쟁에 치중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예체능 및 취미 관련 사교육은 초등학생의 참여(59.6%)가 월등히 많고 중고생 참여율은 10퍼센트 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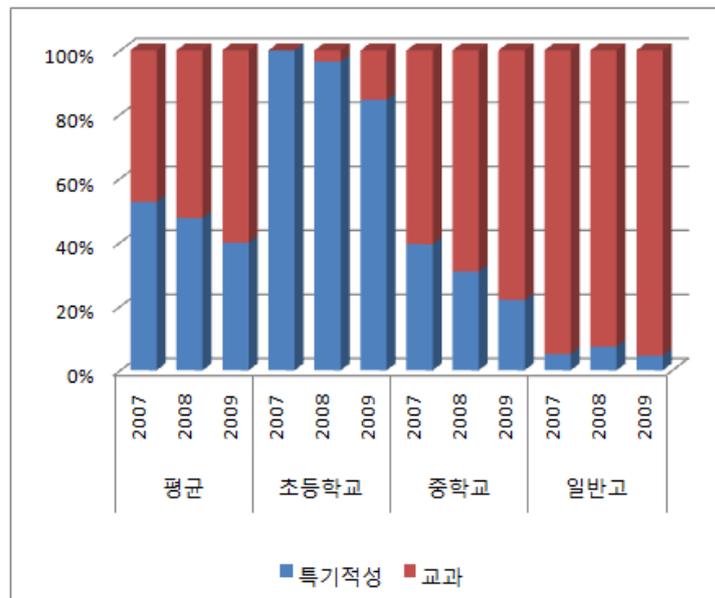
[그림 4]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초등학교

- 일반고



[그림 5]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알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참다운 미래인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

개혁'이 아닌 '교육개혁'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가며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은 최대 임계점에 도달했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와 함께 사교육 소비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거주지역에 따라 사교육의 질적, 양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을 받는 원인은 정부의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다수가 반대하는 일제고사와 그 성적을 공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목고와 유사한 값비싼 학교들을 대거 설립하고 있다. '학교선택제'라는 허울좋은 명목 하에 입시경쟁을 중학생 이하로 확대하려 한다. 안 그래도 극심한 영어 사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시달리는 현실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영어수업을 강화한다. 대입제도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며 '3불 정책' 폐지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교육정책 하에서는 사교육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데 인색하다. 오히려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며 '사교육비 증가세 둔화'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하고 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교육개혁 대책회의'도 중요하겠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소문난 잔치'로 끝났음을 정직히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교육개혁은 어떤 것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진정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원한다면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